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아시아 가치와 제도 신뢰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글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한국, 대만, 일본)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아시아 3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완만한 부의 분배를 같이 이룬 성장과 분배의 예외적인 조합으로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이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2007-2008년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겪으면서 성장과 분배가 결합되었던 예외적인 축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것이다.

아시아 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 ABS)의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가치(Asian Value)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의 복지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에서 아시아 가치는 세 국가를 관통하는 일관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전통적으로 아시아 가치의 중심 요인으로 복지 제공자 역할을 했던 가족 중심주의는 변화된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 시민들의 소득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주제어 복지 태도, 아시아 가치, 소득 분배 공정성 가족 중심주의, 동아시아

I. 서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3개국(한국, 대만, 일본) 시민들의 복지 태도에는 다른 지역 시민들의 태도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존재하는가? 이 세 나라는 지리적인 근접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경제·문화적 특징을 공유한다. 먼저, 이 세 나라는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이다. 일본은 비서구 지역의 대표적인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과 대만은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기획 과제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 선호와 복지 국가> 보고서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민주주의의 성취와는 별개로 세 나라의 제도 신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Chang and Chu, 2005; Choi and Woo, 2016). 또한, 일본을 선두로 하여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 이후 발전 국가의 주도하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이다. 셋째,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근검 절약과 교육 중시, 가족주의와 효,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 권위에 대한 순응과 같은 특징을 가진 아시아 가치의 공헌을 둘러싸고 주목을 끌었던 대표적인 국가에 속한다. 넷째, 이들 국가는 경제 성장기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비교적 균등한 분배 (growth with equity)의 예외적인 조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세 나라 모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했다.

아시아 가치가 지배적인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 체계에 드러난 특징으로는 발전주의(developmental state, Kwon 2005) 또는 생산주의(productivist state, Holiday 2000)가 많이 논의되었다.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복지가 발전하기보다는 가족의 상호 부조나 기업 복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전 국가에서 복지는 경제 성장에 종속된 잔여적인 범주였다. 더구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개인의 성공을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Park and Kim, 1999).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시민들의 부의 재분배 선호는 불평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2018).

이 글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3국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으로서 아시아 가치와 제도 신뢰에 주목한다. 아시아 가치가 지배적인 동아시아 사회에서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으로서 아시아 가치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 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비서구 국가의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아시아적 가치의 지속성(durability)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미치는 보편화 압력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때 성장과 분배의 어려운 조합을 이루었다는 찬사를 받았던 동아시아 3국에서도 1997년 경제 위기

와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의 세계적인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이들 나라에서는 일본을 선두로 재빠르게 고노령화되고 있다. 2018년 일본에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했으며, 한국과 대만에서도 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한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었던 동아시아 3국에서도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고도성장 시기에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존재했던 동아시아 3국에서도 이제는 사회적 이동이 어려운 계층화가 강화된 사회로 변모했다.

1990년대 이후 강화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문화적인 변수가 여전히 유효한가? 제도적인 신뢰의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시민들이 평가하는 복지 체계의 공정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를 아시아 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 ABS)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분석틀

선행 연구에 기반을 두어, 이 글은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으로서 세 가지 접근법(문화적 접근법, 제도 신뢰 접근법, 복지 체계의 공정성 접근법)에 주목한다. 첫째, 최근에 이르러서야 문화적 요소와 사회 정책의 연계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중위 투표자 모델(Downs, 1957)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 접근법(Meltzer and Richard, 1981; Romer, 1975)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상승 과정에서 국가 간 복지 태도와 재분배 선호의 차이가 지속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서유럽의 시민들은 높은 재분배 선호를 보인 반면 미국과 동아시아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분배 선호를 보였다.

1. 문화적 접근법

문화적 접근법에 따르면, 개인의 복지 태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value systems)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먼저, 서로 다른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 속한 시민들은 불평등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해석하는 시민들은 높은 재분배를 덜 선호할 것이다(Alesina and Giuliano, 2015). 반면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보다는 사회 경제적 구조의 편향으로 돌리는 문화가 더 지배적인 사회에 속한 시민들은 더 공세적인 재분배를 선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시민들은 전자의 선호를 가지는 경향이 큰 반면 유럽의 시민들은 후자의 선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문화권의 시민들은 개인의 복지에 관하여 가족의 역할을 매우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Esping-Anderson, 1990; Reher, 1998; Alesina and Guiliano, 2010).

특정 사회에서 가족들의 연계는 다른 사회보다 더 강하다. 예를 들어, 다른 유럽 지역보다 지중해 지역 국가들에서 가족 간 연계가 더 강하다. 또한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동아시아에서 가족 간 연계가 더 강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특정한 복지 정책의 책임이 정부에 위임되기보다는 가족 구조로 내부화된다는(Alesina and Guiliano, 2010).

아시아 가치는 많은 특징을 포괄하지만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주의(familism),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 그리고 강한 권위적 정향(authority orientation)이다(Chang, 2018; Dalton and Ong, 2005; Welzel, 2011).

아시아 가치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인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아시아 가치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아시아 세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나라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문화는 고정불변의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은 아시아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로 분류되었지만 성공적인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들에서는 강한 보편화 과정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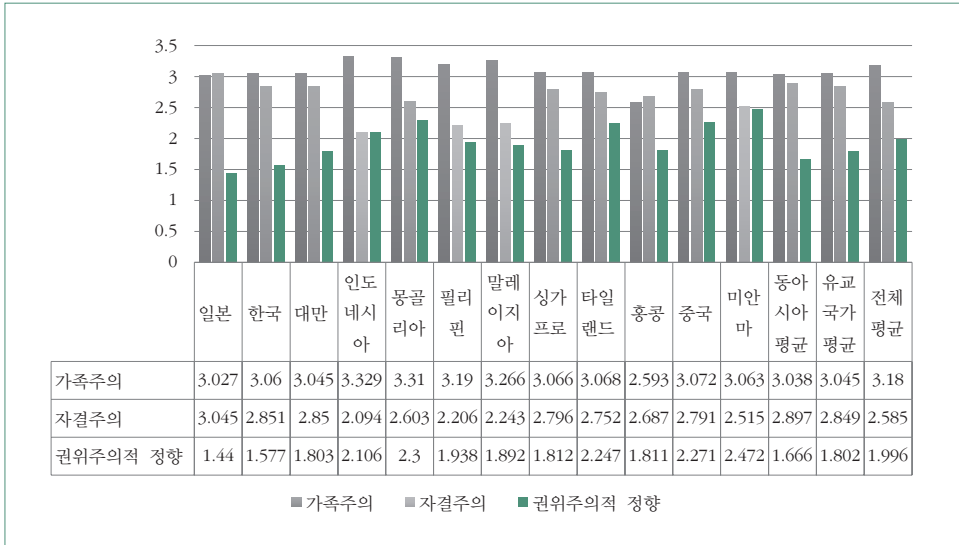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하여 웰젤(Welzel, 2011)은 인간 개발의 보편 모델(universal model of human development)에 대비되는 아시아 예외주의 존

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와 해방적 가치(liberal democracy and emancipative value)에 대한 아시아인들과 유럽 시민들의 차이는 명확하기보다는 완만하였다. 그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간의 지역 간 차이가 아시아 전체와 서구의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인간 개발을 들었다(Welzel, 2011: 29-30).

이와는 반대로, 창(Chang, 2018)은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에서 아시아 가치가 재분배 선호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불평등이 상층하는 조건에서도 왜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시민들은 사회적인 평등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내지 않는지 분석했다. 그는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자립(self-reliance), 효(filial piety)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 가치가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시민들의 재분배 선호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평등 선호(preference for economic equality)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그의 경험 분석은 아시아 가치의 지속이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를 완화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국,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시아 가치 수준의 국가 간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은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에서 가족 우선주의, 자결주의, 권위주의적 정향의 국가별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위 분석을 토대로 아시아 유교 국가 7개국(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중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3개국(한국, 대만, 일본)의 하위 집단과 전체 샘플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전체 조사 대상 국가 14개국의 가족주의 평균 수치는 3.18인 반면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가족주의의 평균은 3.038이다. 유교 국가로 분류되는 7개국의 평균은 3.045로서 두 집단 사이에 존재했다. 이 결과가 나타내듯이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14개국 전체보다 유교주의 국가 7개국의 가족 중심주의 수준이 더 낮았다. 또한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3국의 가족 중심주의 수준은 가장 낮았다. 두 요소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은 급속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한 세대 만에 직계 가족(lineal family)의 비



출처: ABS Wave 4

주: 수치는 가족주의(가족이 우선이라는 믿음)의 국가별 평균을 나타냄. 이 수치는 다음 문항에 기반을 두어 측정됨, “가족을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두 번째로 두어야 한다.” (원 자료는 1: 매우 동의~4: 매우 반대로 코딩되었지만 역으로 재코딩);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는 “부와 가난 그리고 성공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의 문항에 대한 대답(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대체로 반대, 4: 매우 반대)에 기반을 두어 측정; 권위적 정향(authoritarian orientation)의 수치는 강력한 지도자 결정, 일당 독재, 군부 지배, 전문가 결정 변수의 수치의 합을 4로 나눈 수치를 나타냄.

그림 1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주의, 자결주의, 권위주의적 정향의 국가 평균 비교

율은 18.8%에서 5.3%로 감소했다. 반대로, 핵가족의 비율은 같은 기간 81.78%까지 증가했다. 둘째, 가족 중심주의는 전통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두 가치는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겹친다(Huang and Chang, 2017). 가족 중심주의가 전통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가족 중심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발전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아시아 국가에서 가족 중심주의 수치가 더 높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근면과 성실은 아시아 가치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시민들은 개인의 실패를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노력의 부족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Park and Kim, 1998; Kobayashi and Brown, 2003). 아시아 바로미터의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가 운에 의해서 결

정된다고 믿는 시민들의 비율이 44.60%까지 상승했다. 가족 중심주의와는 달리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자기결정 인식 수준(평균 2.897)이 다른 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인식(평균 2.897)보다 더 높았다.

아시아 가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강한 권위적 정향이다(Dalton and Ong, 2005; Keller and Kronstedt, 2005).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인 유교 교리인 삼강오륜(Three Fundamental Bonds and Five Constant Virtues, 三綱五倫)에서 잘 드러난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아시아 가치는 사회적 위계와 권위에 대한 순응을 강조한다. 유명한 유교 교리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같은 사상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권위적 정향을 가진 시민들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치적 권위에 결정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에서 권위주의적 정향은 강력한 지도자 결정, 일당 독재, 군부 지배, 전문가 결정에 대한 태도와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 시민들의 정향을 결합하여 도출되었다. 권위주의적 정향은 전체 14개 국가 평균, 유교 국가 7개국 평균,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 평균 순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정향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1.44)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나라는 미얀마(2.472)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 중 일본(1.44)과 한국(1.577)의 권위주의적 정향의 수준은 비슷했으나 대만(1.803)의 권위주의적 정향은 한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제도 신뢰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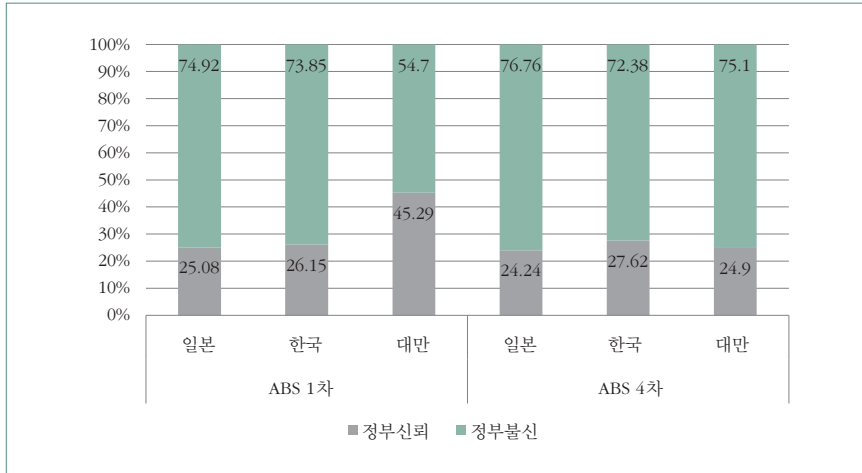
제도적 접근법에 따르면, 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복지 국가의 사회적 기초이다. 만약 시민들이 정부의 투명성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Nye et al., 1997).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은 시민들이 낸 세금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이다. 제도 신뢰는 정부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더 동의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Levi, 1997). 요컨대, 제도 신뢰 접근법에 따르면 정치 체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진 시민들은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큰 반면 신뢰를 갖지 못한 시민들은 반대의 태도를 가질 경향이 크다.

많은 앞선 연구가 복지 국가의 기초로서 제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집제도, 시민들의 정치 신뢰와 시민들의 복지 국가 확대 지지 사이의 연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소수만 존재한다. 에들룬드와 린드(Edlund and Lindh, 2013)의 연구와 하비보프(Habibov, 2014)의 연구가 예외적인 연구이다. 하비보프의 연구는 다층 모형 방법론을 활용하여 중앙 아시아와 동유럽을 대상으로 제도 신뢰와 시민들의 복지 태도의 연계를 검증하였다. 높은 제도 신뢰를 가진 중앙 아시아와 동유럽의 시민들은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국가 수준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 신뢰와 복지 확대 지지 사이의 관계는 공적인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들룬드와 린드의 스웨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시장 제도에 대한 신뢰와 복지 국가 확대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존재했다.

동아시아 사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분석한 앞선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 신뢰와 복지 태도 사이의 관계를 동아시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 성장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이며 복지 정책은 성장 정책에 종속된 잔여적인 범주로 존재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복지 체제는 생산주의적(productivist welfare regimes, Holiday 2000)이거나 발전주의적인 체제(developmental welfare state, Kwon 2005)로 규정되었다. 보편적 복지 체제가 잘 발전된 서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시민들은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2는 아시아 바로미터 1차 조사와 4차 조사를 이용하여 이 글의 분석 대상인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정부 신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 신뢰가 권위주의 국가의 제도 신뢰보다 더 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정부 신뢰 평균은 2.848(1:매우 신뢰~4:매우 불신)인데 반하여 조사에 포함된 다른 9개국의 평균은 2.149로 나타났다. 의회 신뢰도 다르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의 의회 신뢰 수준은 3.086인 데 반하여 다른 9개국의 의회 신뢰 평균은 2.222로 나타났다. 더구나 그림 2가 보여 주듯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



자료: ABS 1차 조사(2001~2003)와 4차 조사(2014~2016).

참고: 수치는 퍼센트를 나타냄.

그림 2 동아시아 민주주의 3개국(한국, 대만, 일본)의 정부 신뢰 변화

전된 민주주의 국가인 3국의 정부 신뢰는 ABS 1차 조사(2001~2003)와 4차 조사(2014~2016)가 실시된 시간적 차이는 15년여 동안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의 정부 신뢰는 1차 조사에서 26.15%로 나타났으나 4차 조사에서는 27.62%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1.47% 증가). 일본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0.84% 감소). 하지만 대만의 경우 같은 기간 정부 신뢰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29%가 정부에 대해 신뢰를 나타냈지만 4차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 수준인 24.9%로 떨어졌다.

동아시아의 낮은 제도 신뢰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논의한 대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 신뢰는 시민들이 복지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확장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Rothstein et al., 2011; Habibov, 2014). 그러나 제도 신뢰와 복지 태도의 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동아시아 사회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낮은 제도 신뢰는 앞서 논의한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아시아 바로미터 4차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가진 시민 중 사회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비율(53.20%)이 전체 응답자에서 같은 인식을 가진 집단의 비율(45.52%)보다 상당히 높았다.

3. 공정성 모델

많은 앞선 연구들에서는 복지 태도 결정 요인으로서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the fairness)이 복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늘고 있다(Lewin-Epstein et al., 2003; Garrec, 2018; Gugushvili, 2019; Rothstein et al., 2011; Svallfors, 2013). 공적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해당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복지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스스테인 등(Rothstein et al., 2011)은 불편부당하고 부패하지 않은 신뢰할 만한 정부 조직의 존재가 시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1984년부터 2000년까지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경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질(the quality of government)이 높을수록 해당 사회의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의 수준이 높았다.

2008년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하여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스발포스(Svallfors, 2013)는 자신의 정부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복지 지출과 높은 세금에 더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질이 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복지 지출에 대한 지지 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즉 정부의 질이 높은 경우에서만 시민들의 평등주의적 태도가 사회지출과 세금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르위스 엡스타인 등(Lewis-Epstein et al., 2003)은 이스라엘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태도와의 관계를 보다 더 구체화했다. 그들의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험분석에 따르면 사회의 위계적 지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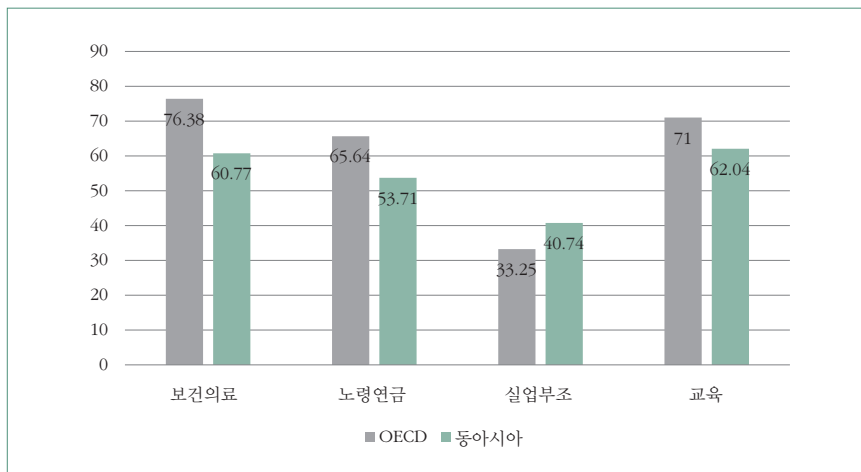
집합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계급과 인종 변수는 재분배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교육과 소득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의 상(image of society)과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원칙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쉬로저(Schlösser, 2018)는 개인의 가지고 있는 공정성 감수성(justice sensitivity)의 성격에 따라 평등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타인에 민감한(other-sensitive) 사람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피해자 민감성(victim-sensitive)을 가진 사람들보다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안정적인 선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4.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재분배 선호

비교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재분배 선호는 어느 수준인가? 그림 3은 국제 사회 조사(Intranational Society Survey Program)의 가장 최근 조사(2016)를 이용하여 OECD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보건 의료, 노령 연금, 실업, 교육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정부 지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예상했던 것처럼,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세 가지 영역(의료, 노인 연금, 그리고 교육)에서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OECD 국가 시민들의 선호가 동아시아 3국에서 시민들의 정부 지출 증가 선호보다 높았다. 하지만 두 집단에서 시민들의 선호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선호의 차이는 의료 영역에서 15.61%였으며 교육 영역에서 8.96%였다. 두 영역 모두에서 동아시아 시민들의 선호가 모두 절반을 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또한 실업 영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선호 수준이(40.74%) OECD 국가 시민들의 선호 수준(33.25%)보다 높았다. 이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르게 동아시아 시민들의 재분배 선호가 두드러지게 낮지 않다는 것이다.



출처: ISSP 2016

참고: 원 질문은 “다음은 정부 지출의 다양한 영역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영역에서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감소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할 때 정부의 지출을 위해서는 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수치는 응답자 중 정부 지출이 증가(매우 많이, 많이)하는 것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3 동아시아 민주주의 3개국과 OECD 국가에서의 정부 지출 선호 비교

III. 연구 설계

이 글의 경험 분석은 ABS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ABS 4차 조사는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의 12개국을 포함하였다. 이 글의 분석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 대만, 일본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을 대상으로 경험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측정(Measurement)

1) 종속 변수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이다. 이 변수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문항에 기반을 두어 측정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원래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 매우 동의 ~4: 매우 반대)로 측정되었으나 역으로 코딩하였다. 이 질문에 동의할수록 불평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2) 설명 변수

앞선 논의에 따라 세 모델(아시아 가치 모델, 제도 신뢰 모델, 공정성 모델)이 주요 설명 변수 모델에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적 수행력 모델이 추가되었다.

먼저 아시아 가치 모델은 세 차원(가족 우선주의, 자기 결정, 권위주의적 정향)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가족 중심주의는 “가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해관계는 부차적으로 둘 수 있다.”라는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원 자료에서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 매우 동의 ~4: 매우 반대)로 측정되었다. 이 글의 경험 분석에서는 거꾸로 다시 코딩하였다. 자기 결정주의는 “가난과 부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모두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의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역시 4점 척도이다(1: 매우 동의 ~4: 매우 반대). 권위주의적 경향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네 가지 변수(강력한 지도자 결정, 일당 지배, 군대 통치, 전문가 결정)의 조합으로 측정되었다. 강력한 지도자 결정 변수는 “의회와 선거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당 지배는 “선거와 공직에 단지 일당만 출마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군대 지배는 “군대에서 정부를 넘겨받아 통치해야 한다.”, 전문가 결정은 “선거와 의회를 없애고 국민을 위해서 전문가가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의 문항에 기반을 두어 측정되었다. 이 네 변수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원자료는 1: 매우 동의 ~4: 매우 반대, 이 글의 분석에서는 거꾸로 다시 코딩하였다.). 이 네 변수를 통합하여 권위주의적 정향 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제도 신뢰 모델은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둘 다 1점(매우 동의)부터 4점(매우 반대)의 범위를 가진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은 각각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셋째, 공정성 모델은 소득 분배의 공정성(fairness of the income distribution), 분배의 공정성(distributional justice),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의 세 차원

으로 측정되었다. 소득 분배의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은 1점(매우 공정)에서 4점(매우 불공정)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소득 분배의 공정성은 “○○은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통해서, 분배 공정성은 “○○과 ○○의 가족이 과거에 들인 노력을 고려할 때, ○○의 가족이 받고 있는 소득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기반을 두어 측정되었다. 세대 간 이동성 또한 1점(매우 많은 기회)부터 4점(매우 적은 기회)의 범위로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님의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님은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적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세 주요 모델에 더하여 경제적 수행력 모델이 추가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적극적인 복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국가 경제의 조건에 대한 회고적 평가, 현재적 조건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는 세 변수가 포함되었다. 회고적 평가는 “○○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의 문항에 기초를 두어 5점 척도(1: 훨씬 나아졌다 ~3: 비슷하다 ~5: 훨씬 나빠졌다)로 측정되었다. 현재 조건에 대한 평가는 “○○님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의 문항을 통해서 5점 척도(1: 매우 좋다 ~3: 괜찮다 ~5: 매우 나쁘다)로 측정되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님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항을 통해서 5점 척도(1: 훨씬 나아질 것이다 ~3: 똑같은 것이다 ~5: 훨씬 나빠질 것이다)로 측정되었다.

3) 통제 변수

이 글의 분석 초점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통제 변수를 포함시켰다. 먼저 정부에서 부자와 빈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는지 또한 사람들이 음식, 의복, 주거지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두 변수 모두 1점(매우 동의)~4점(매우 반대)의 범위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외적 효능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의 문항에 기반을 두어 4점 척도(1: 매우 동의 ~4: 매우 반대)로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교육은 10급간(1: 무학 ~10: 대학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가구 소득은 5급간(1:1분위 ~5:5분위)로 측정되었다. 또한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 변수는 “○○의 총 가구 소득은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십니까?”의 문항을 통해서 3점 척도(1: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3: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로 측정되었다.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고용 여부(1:실업, 0: 그 외)와 결혼 여부(1: 결혼, 0: 그 외) 가변수를 도출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IV. 분석 결과

표 1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제시한다.

표 2는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3국의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순서로짓(ordered logit)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ABS 4차 조사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복지 태도는 불평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로 측정되었다. 종속 변수가 4점 순서형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경험 분석에서 순서로짓 모형이 사용되었다. 표 2에서 변수의 영향력 크기에 대한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승산비(Odd Ratio)를 계산하여 계수와 함께 제시하였다. 모델 1은 동아시아 3국을 모두 분석한 통합 모델이다. 모델 2는 일본, 모델 3은 한국, 모델 4는 대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네 모델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먼저 아시아 가치 모델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아시아 가치 모델을 측정하는 세 가지 변수에서 모델 1~모델 4를 관통하는 일관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통합 모델(모델 1), 한국(모델 3), 대만(모델 4)에서 아시아 가치의 중심적인 요소인 가족 중심주의가 강한 시민들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모델 2에서도 같은 영향력이 확인되었지만 유의수준(0.05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분석 결과는 창(Chang, 2018)의 분석과는 사뭇

표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국가 경제 회고적 평가	20,142	2.729	1.096	1	5
국가 경제 현재 평가	20,063	2.924	0.977	1	5
국가 경제 미래 전망	18,264	2.454	1.022	1	5
선거의 공정성	17,118	1.989	0.908	1	4
접촉하는 사람 수	20,366	2.446	1.209	1	5
가족 우선주의	19,898	3.186	0.703	1	4
자결주의	19,905	2.585	0.985	1	4
권위주의적 정향	16,284	7.985	2,741	4	16
정부 신뢰	19,179	2.285	0.840	1	4
의회 신뢰	18,773	2.394	0.394	1	4
소득 분배	19,057	2.698	0.741	1	4
분배적 정의	19,422	2.271	0.602	1	4
세대 간 이동성	19,965	2.261	0.963	1	5
빈자-부자 대우	19,766	2.411	0.959	1	4
기본적 필요	19,932	2.043	0.815	1	4
외적 효능감	19,331	2.211	0.849	1	4
사회적 지위	19,375	2.966	0.911	1	5
가구 소득	17,542	2.627	1.274	1	5
실업	20,667	0.318	0.466	0	1
결혼 여부	20,667	0.707	0.455	0	1
교육	20,604	5.485	2.590	1	10
연령	20,625	45.100	15.669	17	108
성별(여성)	20,667	0.512	0.499	0	1

출처: ABS 4차 조사

다르다. 그의 경험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경제적 평등(economic equality)으로서 이 글의 분석 대상과 다른 점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경제 위기 이후 복지 공급자로서 가족의 전통적 역할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 글의 경험 분석 결과는 동아시아 복지 태도에서 가족 중심주의의 변화된 역할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시아 가치 모델이 예상했던 대로, 자결주의는 모델 1~모델 4를 관통하여 복지 정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변수는 단지 모델 1(통합 모델)과 모델 2(일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림 3에 나타난 대로, 일본 시민들이 다른 두 나라의 시민들보다 자신의 노력이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일본의 자결주의 평균(3.045)은 대만과 한국의 평균(2.85)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영향력이 일본에서는 확인되었다. 권위주의적 정향은 일본(모델 2)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데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영향력의 방향은 같았으나 유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동아시아에서 권위주의적 정향을 가진 시민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재량(authority discretion)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제도 신뢰 모델의 예측과는 달리, 정부 신뢰와 의회 신뢰 모두 모델 1(통합 모델)을 제외하고 신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모델 2~4에서도 비록 유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정부 신뢰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은 시민들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확대에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가능한 추론은 현재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다.

셋째, 공정성 모델을 측정하는 세 변수 중에서 소득 분배 공정성 변수만이 모델 1~모델 4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득 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할 경향이 높았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모델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모델 2(일본)와 모델 3(한국)에서 분배 공정성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일본과 한국에서 서로 반대였다. 일본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노력에 비해서 받는 소득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불평등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그 방향은 반대

였다. 앞서 자기 결정 변수 결과에서 확인한 바대로 일본의 경우 자기 결정의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즉,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시민들이 빈자와 부자의 격차를 개인의 노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 세대 간 이동성 변수의 결과 또한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서 부정적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모델 모두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넷째, 경제적 수행력 모델을 측정한 네 변수의 영향력은 모델 1~4에 따라 차이가 컸다.¹ 경제적 조건에 대한 회고적 평가 변수는 모델 4(대만)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만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대만의 2014년은 해바라기 학생 운동(Sunflower Student Movement)으로 유명했다. 학생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Cross-Straight Service Trade Agreement)에 저항하기 위해서 정부 청사를 점거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대만에서 누적되어 온 경제 위기,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조건에 대한 인식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경제적 전망 변수는 모델 1(통합 모델), 모델 3(한국), 모델 4(대만)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에서 앞으로 수 년간의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시민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경제 전망이 다소 덜 부정적인 일본에서는 이 변수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필요 변수는 모델 3(한국)에서만 시민들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군 중에서 정부의 부자와 빈자 대우와 연령 변수의 분석 결과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의한 부자-빈자 대우 변수는 모델 1~3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부자와 빈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믿는 시민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델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경향이 컸다. 이 결과는 급속히 고령화되

¹ 익명의 심사자 중의 한 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 경제 조건(에 대한 인식)이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정 경제 조건에 대한 세 가지 변수(현재적 조건, 회고적 평가, 미래 전망)를 포함하여 실시한 추가 분석에서 가정 경제 조건에 대한 인식은 모델 1~4에서 복지 태도 결정 요인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

표 2 불평등 감소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결정 요인에 대한 순서 로짓 분석

변수	모델 1(동아시아)		모델 2(일본)		모델 3(한국)		모델 4(대만)	
	Coef. (Std. Error)	Odds Ratio	Coef. (Std. Error)	Odds Ratio	Coef. (Std. Error)	Odds Ratio	Coef. (Std. Error)	Odds Ratio
가족 우선주의	0.258(0.060)***	1.294	0.156(0.131)	1.169	0.361(0.094)***	1.435	0.282(0.103)**	1.326
자결주의	-0.159(0.053)**	0.852	-0.502(0.120)***	0.604	-0.377(0.082)	0.962	-0.096(0.901)	0.908
권위주의적 정향	-0.070(0.019)***	0.931	-0.020(0.046)	0.980	-0.065(0.027)**	0.936	-0.114(0.035)***	0.891
정부 신뢰	0.146(0.068)**	1.158	0.017(0.189)	1.017	0.112(0.098)	1.119	0.161(0.116)	1.175
의회 신뢰	-0.107(0.065)	0.897	-0.162(0.190)	0.849	-0.088(0.099)	0.095	-0.114(0.103)	0.891
소득 분배	0.683(0.069)***	1.980	0.642(0.169)***	1.901	0.750(0.110)***	2.117	0.709(0.112)***	2.032
분배적 정의	-0.056(0.072)	0.945	0.503(0.169)**	1.654	-0.374(0.117)***	0.687	0.028(0.118)	1.029
세대 간 이동성	0.054(0.045)	1.056	0.020(0.102)	1.020	0.060(0.069)	1.062	0.112(0.081)	1.119
국가 경제 회고적 평가	0.073(0.051)	1.076	-0.002(0.122)	0.997	-0.057(0.099)	0.943	0.149(0.073)**	1.161
국가 경제 현재 평가	0.025(0.044)	1.026	0.102(0.118)	1.108	-0.007(0.092)	0.992	-0.019(0.058)	0.980
국가 경제 미래 전망	0.151(0.045)***	1.163	-0.026(0.112)	0.974	0.306(0.090)***	1.358	0.137(0.061)**	1.147
기본적 필요	-0.092(0.058)	0.091	0.141(0.127)	1.157	-0.214(0.095)**	0.807	-0.102(0.095)	0.902
부자-빈자 공평 대우	0.227(0.059)***	1.254	0.302(0.135)**	1.350	0.209(0.091)**	1.232	0.098(0.100)	1.103
외적 효능감	0.082(0.049)	1.085	0.136(0.095)	1.141	0.175(0.077)**	1.191	-0.029(0.092)	0.970
실업	-0.012(0.088)	0.987	0.265(0.217)	1.304	-0.338(0.146)**	0.712	-0.003(0.139)	0.996
결혼	-0.066(0.096)	0.935	0.193(0.214)	1.213	-0.013(0.177)	0.986	-0.011(0.151)	0.988
사회적 지위	-0.006(0.054)	0.993	-0.179(0.130)	0.835	0.076(0.094)	1.079	0.033(0.081)	1.033
가구 소득	-0.044(0.036)	0.956	-0.033(0.084)	0.967	-0.082(0.059)	0.921	0.009(0.060)	1.010
소득에 대한 만족	-0.081(0.065)	0.921	0.089(0.151)	1.093	-0.171(0.100)	0.842	-0.070(0.112)	0.932
교육	0.032(0.025)	1.032	-0.057(0.062)	0.943	-0.003(0.052)	0.996	0.061(0.037)	1.063
연령	0.014(0.003)	1.014	0.027(0.007)***	1.027	0.001 (0.006)	1.000	0.019(0.005)***	1.019
성별(여자)	-0.062(0.080)	0.939	0.097(0.196)	1.102	0.061(0.137)	1.063	-0.0174(0.123)	0.839
일본	0.112(0.101)	1.118	-----	-----	-----	-----	-----	-----
대만	-0.179(0.124)	0.835	-----	-----	-----	-----	-----	-----
/Cut1	-0.611(0.629)		-0.482(1.338)		-1.787(1.069)		-0.472(1.013)	
/Cut2	2.247(0.610)		2.347(1.314)		1.093(1.043)		2.450(0.973)	
/Cut3	5.309(0.619)		5.629(1.337)		4.219(1.052)		5.672(0.988)	
사례 수 (Number of Obs)	2,745		545		1,036		1,165	
Cragg-Uhler (Nagelkerke) R2:	0.123		0.243		0.145		0.133	

출처: ABS Wave 4.
참고: ***p<.001;**p<.05

고 있는 동아시아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18년 일본은 이미 70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변모했으며 한국과 대만은 65세 인구가 14%를 돌파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일본과 대만과는 달리 한국에서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V. 결론과 함의

이 글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한국, 대만, 일본) 시민들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아시아 3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완만한 부의 분배를 같이 이룬 성장과 분배의 예외적인 조합으로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학자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인으로서 개인의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고 교육에 집중하며 권위에 대해서 순응했던 아시아 가치에 주목하곤 했다. 보편적 복지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에서 복지 제공의 주체는 가족이거나 기업이었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2007~2008년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겪으면서 성장과 분배가 결합되었던 예외적인 축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 3국의 복지 태도 결정 요인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 글은 아시아 가치의 사회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에서 경험했던 근대화와 민주화의 보편화 압력에 주목했다.

ABS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험 분석 결과는 아시아 가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의 복지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에서 아시아 가치는 세 국가를 관통하는 일관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전통적으로 아시아 가치의 중심 요인으로서 복지 제공자 역할을 했던 가족 중심주의는 변화된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 시민들의 소득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

이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복지 태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민주주의 맥락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와 복지 태도에 대한 앞선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 집중되었다(Alesina and Giulian, 2015). 하지만 이 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복지 태도 결정 요인으로서 문화적 요인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맥락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고일: 2019년 6월 10일 | 심사일: 2019년 7월 9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문헌

- Alesina, A and P. Giuliano. 2010. "The power of the family." *J. Econ. Growth* 15 (June), 93-125.
- Alesina, A and P. Giuliano. 2015. "Culture and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s* 53(4), 898-944.
- Chang, Alex Chuan-hsien. 2018. "How do Asian values constrain public support for redistribution?"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77, 139-150.
- Chang, Eric and Yun-han Chu. 2005. "Corruption and trust: Exceptionalism in Asian democracies?" *The Journal of Politics* 68(2), 259-271.
- Choi, E. and J. Woo. 2016.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in East Asian democracies: Psychologic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argument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3), 410-426.
- Dalton, Russell J. and Nhu-Ngoc T. Ong. 2005. "Authority Orientations and Democratic Attitudes: A Test of the 'Asian Values' Hypothesi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 1-21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dlund, Jonas and Arvid Lindh. 2013. "Institutional trust and welfare state support: on the role of trust in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ublic Policy* 33(3), 295-317.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rrec, Gilles Le. 2018. "Fairness, social norms and the cultural demand for redistribution." *Social Choice and Welfare* 50(21), 191-212.
- Gugushvili, Alexi. 2019. "A multilevel analysis of perceive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welfare state preferences." *Intra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8(1), 16-30.
- Habibov, Nazim N. 2014. "Individual and Country-level Institutional Trust and Public Attitude to Welfare Expenditures in 24 Transitional Countries." *Th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41(4), 23-48.
- Holliday, I.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 706-723.
- Holliday, I. 2005. "East Asian social polic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farewell to productivism?" *Policy and politics* 33(1), 145-162.
- Huang, Min-Hua and Shu-Hsien Chang. 2017.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ast Asian Confucian Culture: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7(2), 1-40.
- Iversen, T. and D. Soskice. 2009.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the shadow of the nineteenth century." *World Politics* 61 (July), 438-486.
- Keller, G. and C. Kronstedt. 2005. "Connecting Confucianism, communism, and the Chinese culture of commerce." *Journal of Language for International Business* 16(1), 60-75.
- Kobayashi, C. and J. D. Brown. 2003. "Self-esteem and self-enhancement in Japan and Americ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 34 (September), 567-580.
- Levi, Margaret. 1997. *Consent, Dissent and d Patriot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n-Epstein, Noah, Amit Kaplan, and Asaf Levanon. 2003.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Justice Research* 16(1), 1-27.
- Kwon, Huck-ju 2005.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Development and Change* 26(3), 477-497.
- Meltzer, A. H. and S.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 Polit. Econ.* 89 (October), 914-927.
- Nye, Joseph S.,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ed). 1997. *Why People Don't Trust*

-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 Y. S. and U. Kim. 1998. "Locus of control,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Chinese, and Chinese studen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September), 191-208.
- Park, C. M. and D.C. Shin. 2006.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6 (May-June), 341-361.
- Reher, David. 1998. "Family Ties in Western Europe: Persistent Contras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03-223.
- Romer, T. 1975. "Individual welfare, majority voting, and the properties of a linear income tax." *Public Econ.* 4 (February), 163-185.
- Rothstein, Bo, Marcus Samanni, and Jan Teorell. 2011. "Explain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vs. the Quality of Govern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1), 1-28.
- Schlösser, Thomas, Tim Steiniger, Daniel Ehlebracht, and Detlef Fetchenhauer. 2018. "How justice sensitivity predicts equality preferences in simulated democratic system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3: 75-81.
- Svallfors, Stefan. 2013. "Government quality, egalitarianism, and attitudes to taxes and social spending: a European comparis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363-380.
- Welzel, C. 2011. "The Asian Values Thesis Revisited: Evidence from the World Values Survey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 1-31.

Abstract

Asian Values, Institutional Trust and Welfare Attitude: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Woojin K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determinant of the welfare attitude in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The three East Asian democracies, known as dramatic cases, had attained rapid economic success along with modest wealth distribution. However, since the mid-1990s and in particular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7-2008, Economic inequality became the most salient issues in these societies. With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there changing patterns in the determinant of the welfare attitude in these societies? Based on the latest wave of Asian Barometer Surve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Asian values do not play a significant determinant for welfare attitude in East Asian society. The three dimensions that measures Asian values do not exercise a consistent effect across the four models. Furthermore, the direction of familism as the determinant of welfare attitude was rather opposite to the expectation of the Asian value approach. Those who put family interest first are more likely to demand an active governmental role in dealing with equality. On the contrary, citizen's evaluation of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has consistent effects across the models. This study documen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welfare attitude is no invariant.

Keywords | Welfare Attitude, Asian Values, Fairness of the Income Distribution, Familism, East Asia